

인턴제도를 포함한 일자리 대책의 국내외 프로젝트에 대한 小考

김 종 권*

1. 서 론

정부의 고용정책을 통해서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중진국 이상에선 후진국형 공공근로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시스템적 접근이 고용위기 대처에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예산이 4조 9,000억원이 넘지만, 이 가운데 '고용촉진' 관련 예산비중이 1%도 안 되고 있다. 고용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인력 약 10% 감축을 강행하였다. 한편, 정부는 청년인턴사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직자 생활안정,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하여 일자리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2009년 정부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구 분	예 산	인 원	실적인원(%)	
일자리창출	청년인턴	1조3,049억원	10만2천명	4만2천명(41.4)
	사회서비스	1조5,644억원	16만6천명	13만9천명(83.7)
	희망근로 등 단기 일자리	2조3,521억원	54만9천명	49만3천명(89.8)
	소 계	5조2,214억원	81만7천명	67만4천명(82.5)
고용 유지(일자리 나누기)	5,973억원	25만7천명	24만4천명(94.9)	
고용촉진·능력개발·창업지원	4조4,154억원	289만2천명	173만8천명(60.1)	
생계지원(실업급여 등)	5조7,951억원	179만6천명	88만6천명(49.4)	
전 체	16조292억원	576만2천명	354만2천명(61.5)	

주 : 실적인원은 2009년 6월 1일 기준

자료 : 국무총리실(2009)

* 신홍대 세무회계과

2. 국내의 인턴제도를 포함한 일자리창출 사업

2.1 국내 청년인턴제도 현황

2009년 청년인턴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개 분야 33개의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인턴지원을 포함하여 글로벌 취업지원, 직업훈련, 진로지도, 장려금지원, 종합공용서비스, 창업지원으로 나누어 33개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표 2> 정부의 2009년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1. 인턴지원(5개)	청년인턴제, 행정인턴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관광기업 청년인턴 채용지원, 중소기업 인력채용 패키지
2. 글로벌 취업지원(14개)	해외취업연수, 해외건설인력 양성,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4년제 대학생 해외인턴쉽, 글로벌 무역인력양성, 재외공관 인턴, 국제전문 여성인턴, 글로벌 농업청년리더 양성, 미국연수취업(WEST), KOICA해외봉사단, 대학생해외봉사단 파견, 해외인터넷 청년 봉사단,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미래산업분야 청년리더 양성
3. 직업훈련(5개)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우선선정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한국폴리텍기술 기능인력 양성
4. 진로지도(5개)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전문계고교 취업지원 기능확충, 대학취업지원 기능 확충, 여대생 캐리어 개발 지원, 단기복무 장병 취업 캠프
5. 장려금 지원(1개)	청년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6. 종합고용서비스(2개)	종합직업 체험관 신축,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7. 창업지원(1개)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자료 : 노동부(2009)

인턴제는 행정인턴, 중소기업 청년인턴, 학습보조 인턴, 대기업 인턴, 금융권 인턴 등 유형도 다양한 상황이다. 행정인턴은 실무연수성격을 갖으며 일반행정인턴(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인턴)과 정부자체인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자체 인턴은 해당

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전공분야의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 행정인턴과 구분된다. 중소기업인턴은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된다.

전체 채용 규모는 7만7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인턴제도는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지만,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턴 정책'은 워낙 조급하게 시행하다보니 곳곳에서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인턴의 경우에는 상반기 평균 중도탈락률이 13%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도 2009년 6월 4일 현재 집계로 564명이 중도에 그만뒀고, 탈락률이 약5%다. 하나은행은 2009년 3월 인턴 500명을 채용했지만 현재 302명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3개월마다 300명씩 뽑는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기수당 중도 탈락자가 수십 명씩 생기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9)은 인턴의 종류가 많고 동일한 인턴이라도 운영 기관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인턴 제도가 단기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각 분야에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만족도가 높은 중앙부처는 행정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실무 연수의 기회를 주고, 대민봉사가 중심인 지자체 행정인턴은 고졸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4년제 대졸자에 맞춰져 고등학교 및 전문대 출신 이하 구직자는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고졸 이하 취업으로 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2009)은 공기업의 경우는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취업 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이나 기업 등 민간 기업들은 인턴이 또 하나의 채용 과정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인턴을 강요하는 대신 자율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9)은 기관마다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다르고,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인턴사업별 사업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턴제의 취지나 목적을 재정비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대책으로서 취업지원의 성격과 경력개발의 실무연수 기능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대졸자 중심의 선발을 지양하고 실업대책 대상으로 청년층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등 학력계층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 인턴은 지역인적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을 선발하여 지자체 행정업무의 지원이나 대민 지원서비스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경기회복기·평상시에는 실무연수 및 사회봉사기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 부문인턴은 취업준비생 또는 재학생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실무연수기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무연수기능은 넓은 의미에서 취업역량강화를 포함하지만 인턴 채용기관이 직접 취업연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실무연수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특성(행정기관, 국회 등)에 맞게 기간을 설정하고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하되 종합적 프로그램 개발, 학교(학생)와 연계성 강화, 개별 기관 담당자의 관련 업무 애로 해소를 위해 중앙 집중적 조절 및 지원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 도모가 현실적으

로 어려운 만큼 중앙 운영체계와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행정인턴의 범위를 민간 NGO나 사회복지 시설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인턴십 종료 후 관련 분야로의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기능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즉 개별 기관차원의 취업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앙차원(노동부 등)에서 취업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2009)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모두 인턴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담당 부서에 교육을 맡기는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인턴에게 전공과 연결된 교육을 시키고 이를 위해 사전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턴 제도가 일자리 창출 역할을 못하거나 디딤돌 역할을 못해 공공기관이 실직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프랑스의 ‘청년층 고용계약’처럼 실질적인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벨기에의 경우 정원의 3%는 청년실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로제타 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표 3> 주요 인턴 현황

단위 : 명

구 분	목 표	현행(6월말 기준)
행정인턴	1만 6,000	1만 1,000
공공기관 인턴	1만 2,000	1만 1,000
중소기업 청년 인턴	3만 2,100	1만 4,000
학습보조인턴	2만 6,000	추진 중
금융인턴	6,000	6,000

자료 : 국무총리실(2009), 교육과학기술부(2009), 노동부(2009)

2.2 외국의 인턴제를 포함한 일자리창출 사업

2.2.1 미국

미국의 인턴제는 주요 기업체와 관공서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인턴 대상자는 고졸, 대졸자 이상(재학생 포함)의 자국민은 물론이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학생도 해당된다. 일정기간 민간기업이나 각종 공공단체·연구소·국가기관 등의 공공부문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장래의 사회 진출을 대비한 교육과 실습훈련의 경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민간기업들은 인턴제도를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인턴의 근무능력, 조직의 화합능력 등을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턴의 모집 절차는 인턴 지원자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상기관으로부터 면접과 심사를 통해 채용된다. 채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의 근무조건을 협의한 후 근무를 시작한다.

인턴의 평균 임금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민간기업의 임금수준은 주당 최저 445달러에서 최고 750달러로 높은 편이며, 학력과 직무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과는 달리 백악관이나 행정기관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는 대부분 무급이며 교통비 정도를 지급할 뿐이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재학생의 인턴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인턴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학생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로서는 학교의 학과목으로 인정을 하고 학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턴제에 참여했던 공공기관에서는 직장을 위한 추천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의 인턴제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무성의 인턴 프로그램

국무성의 인턴 프로그램은 인턴제 참여자가 국무성의 업무를 도와주되, 외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여 외교 활동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인턴 대상자는 미국 시민이며 4년제 대학의 3, 4학년 및 대학원생과 2년제 대학의 1, 2학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턴기간은 대부분 학기중 또는 최소한 여름 10주간의 기간으로 한 주에 4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인턴에 대한 수당은 보통 무급이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참여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90일 이상 유급인 경우에는 휴가 및 병가를 제공하고, 무급인 경우에도 재해보상(Federal Torts Claims Act)을 받는다. 인턴은 그 가속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인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인턴제의 유형은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진다. 그 비율은 50대 50으로 국내 인턴의 경우 워싱턴에서 근무하게 되며, 해외 인턴들은 해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프로그램 지원자들의 전공은 전통적인 국제관계 전공자로부터 경영, 행정,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턴의 업무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인 예로는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무역협정, 시민서비스, 비자작업 등과 경제 및 환경 문제를 조사하거나 웹페이지 작업, 전자저널 출판 등의 일을 돕는다.

미국 의회의 인턴 프로그램: LBJ(Lydon B. Johnson) Congressional Intern Program

미국의 의회 내의 인턴 프로그램은 모집 주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대체로 각 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고용하는 프로그램과 위원회나 여타의 조직이 인턴을 고용하는 경우, 대학과 민간조직이 의회의 인턴을 제공하는 경우, 의회지원기관(CSA)내의 인턴 등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1973년부터 시작된 LBJ 인턴 프로그램은 의회 내부의 인턴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973년 시작 당시에는 매년 각 하원 의원들이 2명까지의 LBJ 인턴을 고용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는 입법부의 고용감축과 함께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대부분 자원봉사 형태의 무급으로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인턴제의 참여 대상자는 고교 및 대학 재학생 또는 정부나 사회에 대하여 연구하는 교사들이며, 주로 강의와 세미나를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 대부분은 무급이지만, 의회의 정규예산에서 수당을 받기도 한다.

민간영역의 인턴 프로그램: TWC(The Washington Center) Internship Program

1975년에 설립된 TWC는 비영리 단체로서 대학생들에게 인턴 프로그램과 학술세미나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TWC는 전국에 걸쳐 800여 개의 대학과 연결되어 있으며, 워싱턴 내의 기업, 관공서, 비영리 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2,000~3,000개의 인턴 고용조직을 갖고 있다. TWC는 적절한 인턴에게 숙식을 포함하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술 프로그램과 현장에서의 작업경험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

인턴 참여자격은 국내 및 해외의 대학에서 2학년 2학기 이상인 학생이면서 동시에 학점 평균이 최소 2.5 이상인 자에 한하고 있다. 인턴기간은 3가지 유형(10주-쿼터, 15주-학기, 10주-여름)이 있으며 모두 1주일에 4일 또는 1/2일 이상 참여해야 한다.

다음은 TWC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 보다 숙련된 훈련습득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되는 인턴 프로그램(8개)도 존재한다.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학술과목 과정
- 의회 조찬 과정
- 대사관 방문 프로그램
- 소모임 토론과 전문 워크샵
- 인턴쉽 포트폴리오

TWC는 인턴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인턴 지도관(Supervisor)을 배치하고 있다. 지도관은 인턴의 이력에 관한 정보로부터 인턴에게 알맞은 고용단체들을 선정하고 알선해준다.

인턴의 업무는 회계, 사업, 의회 등 20개의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해당 분야마다 단순 보조업무에서 그 이상의 전문업무까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인턴 프로그램 내용 중 사무가 단지 20%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TWC는 인턴을 단순한 사무경험의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이며 기초적인 전문적 과제를 실행하고 경험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턴 참여자들은 자신의 학교로부터 12~15학점 이내의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2.2.2 영국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급여수급자들의 재취업을 도움으로써 사회보장부(DDS)의 구직자 급여(JSA: Jobseeker's Allowance)를 노동정책과 연계하여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사업으로서 영국의 복지개혁의 핵심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뉴딜 제도는 1997년 7월에 영국 정부가 민영화된 공사의 초

과이득세를 재원으로 하여 1998년 1월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하여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뉴딜 프로그램 중 '보조지원금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은 인턴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18~24세의 6개월 이상 구직급여(JSA)를 신청해 왔던 청년 실업자들이다. 뉴딜 참여자에게는 개별적인 상담원이 지정되어, 게이트웨이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 단계별로 청년 실업자의 훈련과 취업을 연계시키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협력단체의 수는 2001년 현재 9만개 이상으로 민간기업과 자원봉사 조직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뉴딜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게이트웨이, 옵션, 사후지도(follow-through)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ateway 단계

뉴딜의 참여 대상은 18~24세의 청년 가운데 JSA를 6개월 이상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다. 선발후 4개월 동안은 탈실업기간으로 구직활동이 집중되고, 참여자는 개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구직방안을 협의한다. 뉴딜 참여자가 직장을 구하는데 실패하면, 개별 상담원은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어떤 뉴딜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를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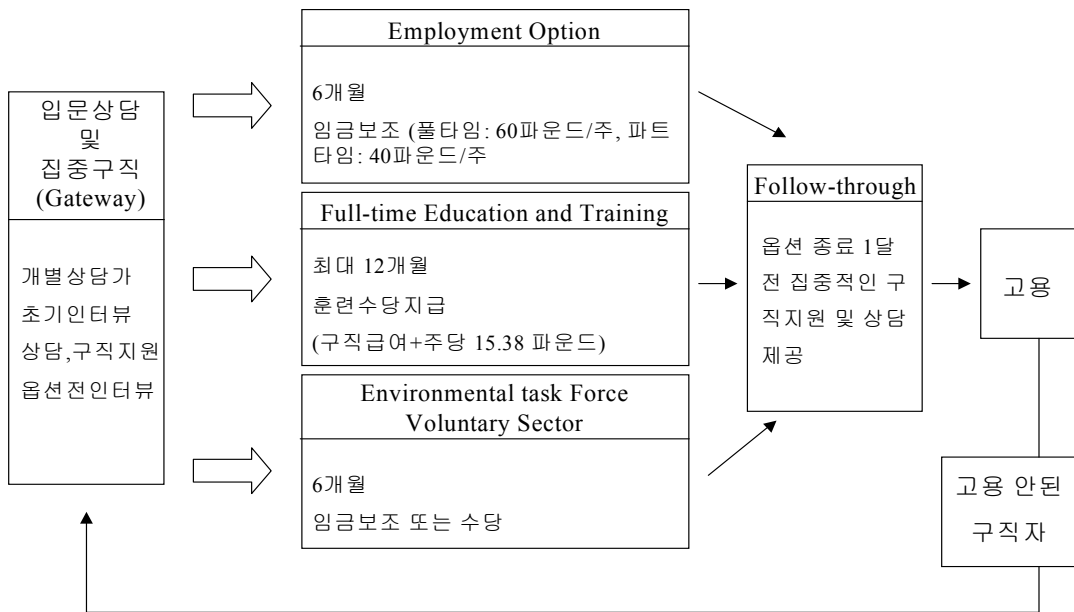
옵션 단계

4개월 동안의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뉴딜의 4가지 옵션에 해당하는 다음의 프로그램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 ① 전일제(full-time) 교육과 훈련 : 기간은 12개월이고, 뉴딜 참여자는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에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급 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Level 2)을 획득할 수 있다. 구직수당제도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 받으며 임대료 보조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 ② 보조금지원 일자리 알선 : 뉴딜 참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6개월간 보조금을 받으며, 전일제 근무일 경우 주당 60파운드(파트타임은 40파운드)를 지급한다. 이때, 사업주는 최소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주당 최소 하루의 훈련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환경정화단(Work With an Environmental Task Force) : 참여자는 주당 5일 30시간씩 6개월간 활동한다. 이 기간 중 생계유지에 적절한 임금 또는 각종 수당을 지급 받는다. 뉴딜 참여자는 지역 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단체 또는 프로젝트에서 최장 6개월간 일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구직수당제도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 받으며 임대료 보조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 ④ 민간단체 봉사활동(The Voluntary Sector Option) : YMCA 등 여러 민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주당 5일 동안 30시간씩 6개월을 활동하게 되며, 주당 1일은 교육훈련을 받는다. 생계유지에 적절한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 받는다. 뉴딜 참여자는 최장 6개월까지 자원봉사부문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데, 참여자는 구직수당 제도에서 지급하는 액수의 급여를 받으며 임대료 보조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림 1> 영국의 뉴딜제도의 고용지원체계



사후지도

참여자들이 뉴딜 기간에 습득하였던 지식과 경험을 살리기 위해 이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옵션 종료 1달 전에 집중적인 구직지원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시도이다. 만일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수당을 받게 되는 참여자는 다시 게이트웨이 단계에서 개별 상담원과 면담하여 뉴딜 선택안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정부(2009)는 1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지도 않으며 직업 교육 등을 받고 있지 않는 비율이 2009년 1/4분기에 13.6%에서 15.6%로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발표하였다. 이는 16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작년 말 81만 명에서 현재 93만 5000명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 중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비율은 17.6%로 경제위기 이후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영국정부 장관들은 현재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저숙련 일자리의 감소에서

그 요인을 찾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미 예산안에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년 중 12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청구한 모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인턴 자리 혹은 직업 관련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12억 파운드(한화 약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인턴 제도를 확대했으며 올해 젊은 층을 위한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억 파운드(약 2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2.2.3 캐나다

캐나다의 인턴 프로그램도 미국처럼 매우 다양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도 다양하다. 즉,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국가 및 민간부문 차원의 프로그램이 다차원적이고 복잡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매우 안정적이고 높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층 고용전략의 YES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층 고용전략 : YES(Youth Employment Strategy)

YES는 청년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캐나다 액션 플랜으로서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위한 기술과 지식,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6년 캐나다 정부는 사업주들과 함께 고용과 관련된 애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사업주들은 일자리에 적합한 피고용인을 찾기 어렵고,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무경험 → 무직업(no experience, no job and no experience)'의 악순환을 주장했다. 그 결과로 캐나다 연방정부는 1997년 3년간 315 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YES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9년 4월 YES 사업이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는 단기간의 이 사업을 상시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YES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주에게 임금보조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15~30세의 미취업, 미취학 상태의 청년층으로 지원기간은 프로그램별로 다양하다. YES의 주요한 4가지 인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① 과학·기술 인턴쉽(Science and Technology(S&T) internships)
- ② 국제 인턴쉽(International internships)
- ③ 특정계층의 청년 인턴쉽(First Nations and Inuit Youth internships)
- ④ 여름학기 취업알선(Student Summer Placements)

YES 사업에는 정부기관 14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데, 기업과 단체는 정부 부처들과 파트너쉽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채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S&T 인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자원부가 파트너로써 참여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들은 자체적으로도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이를 YES의 일환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YES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 개요

캐나다의 청년층 실업률도 다른 연령층의 두 배에 달한다. 청년층의 고실업의 원인은 그들의 포부나 동기 부족에 기인하기보다는 경험과 특정된 기술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YES 사업은 청년층의 '무경험→무직업, 무직업→무경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작되었다.

YES 사업에 참여하는 인턴은 특정한 직위를 갖지 않으며, 고용대체의 성격을 갖지도 않는다. 인턴은 프로그램기간 동안 취업을 위한 기술과 기회를 제공받으며, 실질적인 실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제도의 '인턴' 개념은 교사에 의한 지도와 구조화된 학습 경험을 함축하는 말이다.

YES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기술 습득의 기회가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높은 실업율을 갖는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대상자의 50%는 고등학교 미졸업자와 취업장벽에 부딪힌 자, 30%는 고등학교 졸업자, 20%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배정하고 있다.

운영방식

캐나다 정부의 TBCS가 후원자이며 YMCA와의 파트너쉽을 이루며 운영된다. 인턴 대상자의 학력에 따라 미취학 인턴, 고졸 인턴, 중등교육 이수 후 연수완료자 인턴으로 나누어진다.

채용의사가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재무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면 고졸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YMCA가 직접 선발하며, 졸업자의 경우는 행정기관의 전담자가 채용을 결정한다.

참여자격과 지급임금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15~30세 이하의 캐나다 시민, 미취업, 미취학 상태, 이전에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에 한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학력과 나이에 따라 9~12개월로 나누어진다.

<표 4> 지원자의 학력에 따른 인턴기간과 임금수준

학 력	인턴기간	임 금	혜 택
고교 졸업장 미소지자	10개월	최저임금 기준	YMCA로부터 취업상담 및 사전 직업훈련(4주)
고교 졸업장 소지자	9개월	총 12,150(월 1,350 달러)	YMCA로부터 평가 서비스 제공과 상담
중등교육 후 연수 완료자	9개월	총13,500(월 1,500달러)	없음

2.2.4 중국

원찌아바오총리(2009)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한층 더 강화된 취업사업 실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취업상황을 안정시키고 취업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안정적이며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도 중앙재정 예산은 지난해 보다 66.7% 증가한 420억 위안(한화 약 7조 7,863억 원)을 취업자금으로 편성했으며, 지난 4월말까지 중국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수는 365만 명, 농민공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의 하락세가 전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취업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며, 신규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고, 반면 등기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대졸자와 농민공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드시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견지하고 진일보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각종 정책조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서부 지역 대졸자 인턴사원에 대한 기본 생활비를 보조하고, 중앙재정의 취업 전용자금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동북 7개 성(시)에서 실업보험자금 지출 시범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재정에서 공공 취업서비스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발표한 5개 취업 강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정책조치들의 실현에 중점을 둔다. 중앙재정 예비비 항목의 취업 전용금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제2차 취업 전용금을 투입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크고, 기타 확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안정을 동시에 실시한다.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중소기업 융자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 더 많은 취업 잠재력을 발굴한다. 셋째, 대졸자 등 주요 취업군의 취업에 지속적으로 매진한다. 각종 기업과 과학연구단위의 대졸자 채용을 장려하고, 졸업생의 기층단위 취업 및 창업을 인도하고 장려한다. 넷째, 특별 취업훈련 계획을 신속하게 실시한다. 훈련 보조금 정책을 실행하고, 기술학교의 모집 정원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상급학교 미진학 중,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노동예비제 훈련에 참가하도록 한다. 다섯째, 공공 취업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강화한다. 지방도시, 하부행정 단위 및 지역사회의 공공 취업서비스 사업의 토대를 마련한다.

2.2.5 스웨덴

스웨덴의 불경기로 감원 예고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0월 한 달 간 감원 예고를 받은 근로자의 수는 19,500명 가량이었다. 2008년 스웨덴의 국영 직업 알선소는 보통 장기 실업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로써 실업일수가 300일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 들어 정책 방향을 바꾸어 감원 예고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증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 1인당 실업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한 것이다. 국영

직업 알선소에서 제공하는 단기 교육은 주로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마친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바로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영 직업 알선소에서 이렇게 실업의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 대해 단기 직업교육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인턴직 또한 근로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확인서 발행 등도 서둘러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영 직업 알선소는 근로자들의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력 부족이 심한 직업 중에는 장기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교육은 보통 일반 대학에서 제공하며 스웨덴의 대학 교육은 국영 직업 알선소에서 특별히 지원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도 본인이 스스로 소단위 지방자치정부에서 제공하는 성인대상 고등학교 과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2.2.6 프랑스

프랑스는 2007년 9월 7일부터 시작된 '노동시장의 현대화(modernisation du marché du travail)'를 위한 노사협상이 2008년 1월 11일 합의에 도달하였다. 프랑스판 '유연안정성(flexisecurité)'이라 일컬어지는 이번 합의는 기업에게는 근로계약의 유연성을, 근로자에게는 실업보상 및 교육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 합의에 대해 3개 기업단체와 4개의 노동조합(FO, CFTC, CFE-CGC, CFDT)은 서명하였지만, CGT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합의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턴기간(période d'essai)의 연장 : 무기계약을 위한 인턴기간을 연장한다. 현행 특별한 산별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근로자에게 최고 2개월, 기술자에게 3개월, 간부에게 4개월로 적용되던 인턴기간이 산별협약을 통해 각각 최대 4,6,8개월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무기계약의 합의종결(Rupture conventionnelle) : 계약 종결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장려하기 위해 사직도 해고도 아닌 새로운 계약 종결 방식을 만들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담되는 소송문제와 근로자가 사직 시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일종의 합의종결제도이다. 이는 양방의 합의에 의해 제기되고 지방노동사무소장(directeur départemental du travail)에 의해 인가되며 해당 근로자는 해고보상과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별 근로계약 : 일종의 프로젝트 단위 계약으로 기간만료가 아닌 사업종결을 기준으로 한 계약이다. 이것은 기술자와 간부에게만 해당하는 계약으로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한 것이다. 이 계약의 도입은 기업이나 산별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며, (임시직처럼) 일시적인 활동의 증가를 이유로 사용될 수 없다.

넷째, 실업최저보상금제도 : 실업보상금이 이전 월급의 20% 이하로 떨어질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다섯째, 실업 후 권리보존 :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보험을 실업 후 최소 3개월, 최대 실업보상기간의 1/3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직장에서 획득한 직업교육시간을 실업 이후에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직장

에 고용되더라도 새로운 사용자와 합의하에 누적된 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25세 미만 구직자수당 : 비자발적으로 고용에서 배제되고, 실업수당을 받을 만큼 충분한 기간을 일하지 않은 25세 미만의 구직자를 위해 실업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수당제도를 신설한다.

일곱째, 직업교육의 확대 : 고용에서 배제된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기금을 마련한다. 서명에 불참한 CGT의 마리즈 뒤마 전국비서는 무기계약 합의종결시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인가가 추가로 필요하도록 한 것을 두고, "결국 모든 노동조합의 단결로 기업주가 움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이전 최소적응수당(RMI)에서 배제되었던 25세 미만을 위한 수당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합의내용이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면보다 위험한 측면이 더욱 많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대통령궁은 "사회적 파트너들의 능력과 사회적 대화의 성숙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격찬했다. 이 합의안은 법안으로 작성되어 오는 2008년 6월까지 의회에서 논의되었다.

2.2.7 외국 인턴제 사례의 시사점

지금까지 외국의 청년층 실업정책 중 정부지원 인턴제와 비슷한 유형의 일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시 유능한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과 여기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경우는 사실상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운영되고 있다(유럽의 청년층 미취업자 대상 프로그램은 <부록> 참조).

미국의 경우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실시하되, 임금보조보다는 학점인정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반면, 실업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채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나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동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예상되는 갈등을 조절하고 적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담 및 지도자는 별도의 훈련을 통해 양성되고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유도해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부지원 인턴제의 운영체제는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인턴제와는 달리 산·학·간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참여 기업들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배제시킴으로써 다양한 인턴제 참여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받지 못해 적성이 안 맞거나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많은 우리 나라에 개별 지도관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연구결과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청년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들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임금보조제 등에 의한 역기능, 즉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사중적 손실(deadweight loss), 낙인효과(stigma effect) 등으로 인하여 순고용효과가 낮고, 시장부문에서 훈련이 수반되지 않는 단기적이고 폭넓은 대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보조금에 대한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중적 손실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일자리 변화를 가속화시켜 청년층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미래의 진로에 대한 전망이 없는 저임금 직종에 가두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부지원 인턴제는 인턴업무와 일반업무가 구분이 안되고, 인턴의 참여 자격을 넓게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대상 기업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보조 지원제도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참 고 문 헌

- [1] 국무총리실(2009), “「사교육 없는 학교」 차질 없이 확대토록 지시”, 보도자료.
- [2] 국무총리실(2009), “공공부문 인턴, ‘취업 징검다리’역할 강화”, 보도자료.
- [3] 국무총리실(2009), “추경예산 4.9조 투입, 55만개 새 일자리 창출”, 보도자료.
- [4] 금융연구원(2009), “최근 고용상황 점검과 대응”, 주간 금융브리프(2009.7.4~7.10).
- [5] 노동부(2009). “청년고용 추가대책”.
- [6] 류지성(2009),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7] 박수진(2009), “공공부문 인턴 30%,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 한국경제신문.
- [8] 반정호, 김경희, 김경희(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 3, 8월, pp73-103.
- [9] 손민중(2009), “만성실업의 탈출 : 청년취업 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 [10] 신경림(2009), “중소기업 인턴채용 소극적”, 서울경제신문.
- [11] 이병화·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제언”, 한국노동연구원.
- [12] 이상준·김미란(2009), “인턴제와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Issue Paper 2009-1,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13] 이언오(2009), “생태계 관점에서의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 [14] 이정훈(2009), “공공기관, 월급까지 깎더니…정규직 내몰고 인턴 채웠다”, 한겨레신문.
- [15] 이정훈(2009), “‘심부름꾼’ 청년인턴…몇달 뒤엔 ‘도로 취업준비생’”, 한겨레신문.
- [16] 장기영(2009), “취업자수 4,000명 증가...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YTN.
- [17] 장용석(2009), “병원·농협 등도 청년인턴 고용 시 정부지원 받는다”, 아시아경제신문.
- [18] 전용빈(2009), “초중등 인턴교사 1만 6,250명 채용”, 국민일보.
- [19] 조준모(2009),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선진국 고용전략의 시사점: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고용정책』(pp. 2-35), 4월 30일.

- [20] 조태근(2009), “실업률 3%? ‘유사실업률’ 13% 넘었다”, 민중의 소리.
- [21] 최재봉(2006), “지식기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Co-op 프로그램”, 『산학협동 성공사례 세미나』, 8월 23일.
- [22] 통계청(2009), 6월 고용동향.
- [23] 한국노동연구원(2009), 청년인턴 사업.
- [24] 황보연(2009), 중장기 고용대책 없이 단기 일자리만 쏟아내, 한겨레신문.
- [25] 황예량(2009), 참여자 절반 ‘60세 이상’...실직자 흡수 ‘취지 무색’, 한겨레신문.
- [26] 황예량(2009), 희망없는 ‘희망 근로’...“시간 때워 용돈벌이” 쓴웃음, 한겨레신문.
- [27] 가디언지(2009), “Nearly a million young people not in work or education”, 6월 24일.
- [28] 르몽드(2008), “Lamorce dune "flexiscurit" la française”, 1월 12일.
- [29] 르몽드(2008), “Le march du travail va voler vers la flexiscurit”, 1월 12일.
- [30] Bailey T. & Hughes K., Barr. T(2000), "Achieving Scale and Quality in School-to-Work Internships: Finding from two Employers Survey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Spring vol. 22, no. 1, pp41 -64.
- [31] Bassi L.J & Ludwig J.(2000), " School-to-Work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Multi-Firm Case Study of Training, Benefits and Cost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3, No.2, Jan.
- [32] Card David, Ibararan Pablo, Regalia Ferdnando(2007), "The Labor Market Impacts of Youth Training in the Dominican Republic: Evidence from a Randomized Evaluation", NBER Working Paper, No.12883.
- [33] CFDT홈페이지(2008), “Accord du 11 janvier 2008 sur la modernisation du march du travail”.
- [34] Dinardo John, Fortin Nicole M, Lemieux Thomas(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Vol.64, No.5, September, pp1001-1044.
- [35] Light. A. & Ureta, M.(1995), "Early-Career Work Experience and Gender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3, No.1.
- [36] Light. A(2001), "In-School Work Experience and the Returns to School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9, No.1.
- [37] Luecking, R. G. & Fabian. E.(2000), "Paid Internships and Employment Success for Youth in Transition", CDEI, fall 23:2.
- [38] Martin Biewen(2001), "Measuring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Income Distribution: an Application to the East German Transition Proces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 83(1), pp185-202.
- [39] Stock James & Watson Mark (2003),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Addison Weseley.
- [40] Svenska Dagbladet(2008), “Snabbare hjlp fr varslade”, 11월 28일.